

정 책 과 제 도

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정리

홍서연*

I.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활동

◆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보고

-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전략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(2001. 6. 29)
 - 보고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및 진단·점검 결과를 30개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추진할 부처 지정
 -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인적자원개발 회의에 보고(2001. 7. 20, 9. 19)

◆ 교육인적자원정책 개발을 위한 위원회 활동

- 2001. 6. 29. 대통령 보고 이후 계속하여 교육인적자원정책 및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(3회), 운영협의회(5회), 분과위원회(2회)를 개최
-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토론회(4회) 및 워크숍, 세미나, 전문가 협의회 등을 10여회 개최
-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관련 주요 사안의 논의를 위해 교육선언특별위원회 및

*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(hong@kli.re.kr).

고등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

II.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

◆ 학교 - 노동시장 이행 지원체제 구축 방안

□ 학교-노동시장 이행 지원체제 구축 필요성

○ 최근의 청년 취업난은 구조적·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사후적인 단기 실업대책을 넘어선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‘학교-노동시장 이행 지원체제’ 구축이 요구됨.

※ 미국의 ‘학교-직업세계 이행 기회법(School-to-Work Opportunities Act)’은 1994년 미국 연방정부가 청년들의 순조로운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해 첫째,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한 학교중심 학습(school-based learning), 둘째, 현장을 학습의 주요한 장으로 하는 일 중심 학습(work-based learning), 셋째,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연계 활동(connecting activities) 등의 세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. 행·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수준에서의 학교-직업세계 이행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장려하고, 학교와 직업세계 사이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.

○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는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·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임.

– 2004년에 이르면 대학입학대상 연령인 18세 인구(63만명)가 현 대학정원(65만 5천명)보다 더 적어지고,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현 대학정원의 73%로 감소할 전망이다.

□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

○ 청년의 취업난

– 청년(15~29세) 실업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2001년 현재 실업률 7.6%(36만명)를 기록하고 있음. 그러나 전체 실업률 3.7%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

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실업자 중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어 청년 실업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

- 구조적 원인은 경력근로자 우선채용 관행으로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있음.
 - 법제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라 노동 및 숙련 수요가 급속히 변화하고 시간경쟁(time-based competition)이 치열해 질수록 경력근로자에 대한 우선채용 관행이 확산되어 신규 졸업자의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.
 - ※ 주요 기업집단에서의 경력직 채용 경향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. 1996년 주요 기업집단의 채용자 가운데 신규 졸업자가 65%, 경력직이 35%를 차지하였던 반면, 경제위기를 겪고 난 2000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26%, 74%로 변화함.
- 제도적 원인은 학교와 노동시장의 괴리에 있음.
 - 고등학교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의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, 학교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인력수급의 양적·질적 불일치 현상이 심화됨.
 -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늦으며, 노동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적임. 학교-노동시장 이행기간이 장기적인 것은 외국에 비해 훨씬 높은 대학 진학률 및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인 군 입대의 문제 외에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.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장기화는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청년 노동력의 유희화를 낳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.
 - ※ 우리나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연령은 24.3세이며, 학력별로는 고졸 20세, 전문대졸 24세, 대졸 27세임.

□ 청년 노동시장 정책방향과 과제

-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의 구축
 - 「취업실태 공표제」 도입 : 「졸업자 진로조사」(Graduates' Survey)를 매년 실시하여 전공·계열별 취업실태 공표
 - 「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」 실시 :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
 - 「주문식 교육」의 활성화 :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‘주문식 교육’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문대학에서 대학

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확충

- 일자리 탐색 및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체험 강화
 - 「기업연수제도」 도입 : 대학이 주관하는 「기업연수제도」(Internship)를 도입하여 산학연계 강화
 - 재학생의 자발적인 근로체험 기회 확대 : 학기제 운영을 다양화하고, 휴학 요건 및 기간을 유연화하며, 방학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, 재학생의 시간제·단기 취업 등 자발적인 근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
- 직업선택 지원을 위한 진로지도·취업지원서비스 강화
 - 학교의 진로지도 및 취업담당인력 확충
 - 학교와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 강화
 - 대학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체제 구축
- 학교-노동시장 이행 인프라 구축
 - 「표준학과분류표」 개발 : 전공·계열과 직업분류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수급 전망에 반영
 -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개선 :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(통계청)에 졸업년월 등 청년층 관련 조사항목 추가. 청년층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9월 「경제활동인구-청년부가조사」 실시
 - 산학연계 지원 협의기구의 활성화

◆ 계속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 방안

□ 계속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필요성

-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직업능력의 개발·향상을 통한 직장인의 취업능력 배양이 절실
 -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노동력의 유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이 인적자원을 자체 개발하기보다 외부조달하는 경향이 증대하여 기업의 인적자원투자 유인이 약화됨에 따라 근로자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.
 - 저숙련 근로자의 실업 및 빈곤 노출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의 균등한 접근이 요구됨.
- 학교 이외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결과평가와 그 인증을 통한 평생학습촉진제도 구비

필요

- 대학 이외의 교육훈련기관, 직장과 지역사회 등에서의 비형식적 학습으로 획득된 능력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것은 학습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직장과 사회에서 보다 질 높은 능력함양을 보장함.

○ 평생학습의 접근기회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촉진

- 고등교육단계의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학습 결과를 평가·인증하여 계속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력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.

□ 계속학습의 현황과 문제점

○ 성인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

- 2000년 1년 동안 성인(재학생 및 재수생 제외)이 평생학습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은 17.2%에 불과
- 주요 선진국의 계속교육 참여율은 30~50%에 달하고, 특히 직업직무와 연관된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.

○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학령층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치중

- 35세 이상 성인 중 고등교육단계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2.87%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위치하고 있음.

○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감소

-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의 추이를 보면, 총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2.1%, 1997년 1.9%이었으나,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.2%로 크게 감소하였고,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1.4%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과거와 같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

○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

- 평생교육법에 의한 유·무급휴가제는 실시 가능하도록 선언적인 의미만 담고 있고 행·재정 지원방안은 없음.
- 교육계좌제는 단순히 평생학습 결과를 누적 기록하는 기능밖에 없고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.
- 현재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미흡함.

○ 재직자의 다양한 경험학습은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.

- 학점은행제는 현재 국가기술자격 등 일부 자격에 한하여 학점 인정 : 기술사 45학점, 기능장 39학점, 기사 30학점, 산업기사 24학점

□ 계속학습의 정책 방향과 과제

○ 경험학습의 인증체제 구축

- 경험학습의 인증을 통한 계속교육 기회 확대
- 경험학습 결과의 평가·인증을 통한 자격 부여

○ 근로자의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지원 확대

-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: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tax credit)를 확대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
-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: 학습휴가제 도입과 비정규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

◆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

□ 도서관 정보인프라 필요성

○ 지식강국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

-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본 정보인프라 구축
- 도서관 활용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교육·학습욕구 충족
- 초·중등학교 도서관, 대학도서관, 공공도서관의 정보력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조성

○ 학교도서관의 교수·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정립

-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기반 구축
- 멀티미디어 학습매체의 활용으로 정보통신기술(ICT)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
-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

○ 대학도서관 통합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·연구활성화 지원

- 대학 학술정보의 원스톱서비스 기반 조성
- 첨단학술정보의 생산·유통·활용의 체계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산실 역할수행
-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·연구 정보기지 역할수행

- 세계 선진대학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조성
- 공공도서관의 정보·문화·평생학습 기능 강화
 -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정보화의 주역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
 -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, 정보격차·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·문화·평생학습 기능 강화
- 학교도서관 활성화
 - 학교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 : 학교도서관의 3대 기본 여건인 장서, 사서교사, 예산의 미흡
 -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
 - 학교도서관의 설치 확대 및 멀티미디어화의 추진
 - 전담 사서교사 확보 및 콘텐츠 개발·보급 효율화
 -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체제 강화
- 대학도서관의 학술·연구 지원체제 강화
 -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
 -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연계구축 미흡
 - 학술정보 공유를 위한 대학도서관 지원체제 미흡
 - 대학도서관의 학술·연구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
 - 「대학도서관협력망」 구축
 - 분담수서 및 상호대차제도 실시
 - 첨단 학술정보 활용지원 강화
- 공공도서관의 정보·문화·평생학습 기능 강화
 -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
 - 공공도서관의 절대수 부족
 - 장서량 부족으로 공공도서관 역할 미흡
 - 공공도서관 직원 및 운영예산의 부족
 -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정보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계 미흡

- 공공도서관의 정책방향과 과제
 - 지역정보화의 기지로서의 공공도서관 지원 확대
 -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추기능 강화
 - 서지정보 및 유통정보의 표준화

Ⅲ.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향후 추진계획

◆ 2002년 하반기 종합보고 과제(안)

-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
-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
- 인적자원개발의 형평성 제고
- 생애에 걸친 학습체제의 구축
- 인적자원개발·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

◆ 특별 추진과제(안)

- 21세기 교육 선언
 -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의견조사, 각계 원로인사의 자문, 부문별·지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
- 교육개혁 추진 평가
 -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추진을 정리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‘5.31. 교육개혁’ 이후의 교육개혁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